

보도시점 2024. 4. 15.(월) 16:00 배포 2024. 4. 15.(월) 10:00

## 역동경제 구현을 위한 연구개발(R&D) 혁신 등을 위해 부처 간 벽을 허문다.

- 전략적 인사교류 후속조치, 교류 대상 부처와의 협업과제 확정
- 기획재정부·과학기술정보통신부, 혁신·도전적 R&D 및 글로벌 R&D 투자 확대 등을 위한 R&D 예비타당성조사 제도 개편, 민간 R&D 활성화 등 추진
- 기획재정부·외교부, 전략적 ODA 수행을 위한 유무상 연계사업 확대

기획재정부는 4월 15일(월) 「제1차 협업과제 점검협의회, 국무조정실 주관)」에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및 외교부와의 협업과제를 각각 확정하였다. 이는 부처 간 칸막이를 허물고, 협업 행정을 구현하기 위해 실시된 ‘전략적 인사교류\*’ 후속 조치의 일환이다.

\* 중앙부처 국·과장급 전략적 인사교류직위 24개 교류 시행 중('24.2.12~)

- 기획재정부 소관: (국장급) 정책조정기획관-과학기술정보통신부 성과평가정책국장 (과장급) 개발사업과장-외교부 개발전략과장

우선 국장급 교류직위와 관련하여 기획재정부 및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첨단기술 분야 글로벌 경쟁이 가속화되는 가운데, 우리 경제의 성장동력 확충 및 역동경제 실현을 위해 연구개발(R&D) 혁신이 절실한 상황이라는데 인식을 공유하고 「역동경제 구현을 위한 R&D 제도 혁신」을 위해 협력해 나가기로 하였다.

구체적으로는 혁신·도전적 R&D 및 글로벌 R&D 투자를 확대하고 혁신 기술에 대한 투자의 적시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R&D 예비타당성조사 제도를 개편하는 한편 민간의 도전적 연구개발 참여 촉진을 위한 「정부납부 기술료 제도개선 방안」, 과학기술 출연연 공공기관 지정 해제(1.31)에 따른 「출연연 운영 혁신방안」 등을 함께 마련해 나갈 계획이다.

한편, 외교부와는 전략적 공적개발원조(ODA\*) 수행을 위하여 「유무상 연계사업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유상(차관사업)·무상 ODA를 각각 총괄하는 기획재정부와 외교부가 각 분야의 전문성과 정보, 네트워크 등을 공유함으로써, 개발협력사업 전 단계에 걸친 협업 시너지를 확대해 나간다는 취지이다.

\* **Official Development Assistance** : 정부를 비롯한 공공기관이 개도국의 경제발전과 사회복지 증진을 목표로 제공하는 원조

기획재정부는 이번 전략적 인사교류를 통한 협업이 국민이 체감하는 변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교류대상 부처와 함께 과제별 진행상황 및 성과를 면밀히 관리함으로써 상호 전문성을 공유하고 시너지를 창출해 나갈 예정이다. 이를 위해 각 부처 과제 소관 국장을 공동대표로 하는 기관간 협업협의체를 통해 협업과제와 관련한 현안을 논의·조정하는 등 긴밀한 협업과 소통을 지속해 나가는 한편, 협업과제 성과관리를 주관하는 국무조정실과도 유기적으로 협조해 나갈 방침이다.

담당 부서	기획조정실 혁신정책담당관	책임자	과 장 박언영 (044-215-2530)
		담당자	사무관 김교중 (044-215-2533)
	정책조정국 신성장정책과	책임자	과 장 나윤정 (044-215-4550)
		담당자	사무관 박홍희 (044-215-4551)
	개발금융국 개발사업과	책임자	과 장 신희선 (044-215-8740)
		담당자	사무관 신태섭 (044-215-8741)

연번	교류직위	주요내용
1	기재부 정책조정기획관 과기부 성과평가정책국장	<b>▶ 역동경제 구현을 위한 과학기술 기반의 혁신생태계 강화</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역동경제 구현을 위한 R&amp;D 혁신</li> <li>·사용 후 배터리 산업 육성을 위한 기반조성</li> <li>·데이터 산업 활성화를 위한 지원정책 마련</li> <li>·이공계 대학원생 안정적 지원기반 조성</li> <li>·연구개발 선순환 체계 강화를 위한 기술료 제도 개선</li> </ul>
2	기재부 개발사업과장 외교부 개발전략과장	<b>▶ 전략적 ODA 수행을 위한 유무상 연계사업 확대</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전략적 ODA 수행을 위한 유무상 연계사업 확대</li> <li>·민간기업의 개발협력 활동 참여기반 확대</li> <li>·대내외 개발협력주체와의 유·무상 통합 네트워킹 강화</li> </ul>